

한화 김동선, 푸드테크 확보 의지... 외식사업 등 시너지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한화그룹 아워홈 인수

인수 위한 계열사 설립 공식
급식·서비스 사업 등 경쟁력 강화
구지은 전 부회장 지분 희석 검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전격 인수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인수를 위한 계열사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설립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당장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1340만주(58.6%)를 인수한다.

한화그룹이 아워홈 인수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



한화그룹 전경. (원형사진)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조트 및 한화비전의 미래비전총괄을 맡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은 푸드테크와의 시너지를 위해 급식 업계 2위인 아워홈을 점찍고 인수를 추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호텔·레

저 사업과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결합해 그룹 차원의 외식·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한화푸드테크와 한화로보틱스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급

식 사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술을 계열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워홈의 기업 가치를 총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86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한화그룹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계약 주체로 나서 자체 보유자금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인 IMM크레딧솔루션으로부터도 2500억~3000억원을 끌어온다.

다만 당초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화비전이 “투자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사들과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날 공시에서 “아워홈 주식회사의 주주인 구본성, 구미현 외 2인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우리집에프앤비 주식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전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아워홈 주식 매매를 둘러싼 당사자 지위와 권리, 의무 전부를 이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아워홈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경영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차녀 구명진 씨(19.6%)와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20.67%)은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다.

한화그룹은 아워홈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구지은 전 부회장 측 지분을 희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1면 ‘아파트 줌줍 무주택자’서 계속

유주택·지역 등 청약접수 60% 제한... 실수요자 보호 방점 “무주택 취지 맞게 개편”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광역권 거주 요건 탄력적 부여
“상반기 중 빠른시일 내 개정”

청약확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현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김현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과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과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쳐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들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까지 신설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란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해외 IB 절반, 美 금리인하 축소 전망... 韓 ‘경계-성장’ 딜레마

연초부터 환율 1450원대 웃돌아
금리 기조에 따라 내수경기 좌우

글로벌 투자은행(IB) 절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145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해야 하지만, 내수 인도가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 중 5곳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美 올해 금리인하 0~1회 전망 확산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4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한 달 전보다 0.01% 포인트(p) 상승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4.0%로 하락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 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도 1월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1회로 낮췄다. 통상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부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와 트럼프 정책의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클리카지 1회 전망을 유지하며 모두 5곳의 IB에서 올해 0~1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韓 성장률 먹구름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45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연 3.0%의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평균 환율은 1455원이다. 지난달과 비슷한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수(투자·소비) 경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 -0.1%p, -0.9%p,

-0.8%p로 결국 GDP를 0.4%p 끌어내렸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 폭은 2003년(-3.2%) 이래 최대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채 상황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로 부채 상황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환경(환율 상승)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불안 곳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